

행복과 사회적 경제: 시민경제학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이 상 호*

논 문 초 록 시민경제학은 관계재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을 제시함으로써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공한다. 다만 시민경제학은 관계재가 생산·소비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중시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사익추구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복원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민경제학의 타당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공존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며, 관계재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 또한 두 영역의 공존 가능성에 따라 논리적·현실적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어떻게 복원·확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행복경제학, 관계재, 시민경제학, 이스털린의 역설, 사회적 경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 B3, D6, L3

투고 일자: 2020. 1. 25. 심사 및 수정 일자: 2020. 3. 9. 게재 확정 일자: 2020. 3. 23.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e-mail: lsh09191@naver.com

I. 서 론

경제학¹⁾에서 행복은 대체로 물질적 욕망 충족의 문제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따른 물질적 생산능력의 증대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행복 증대로 이어진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혹은 설명방식은 이스털린에 의해 개인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소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Easterlin, 1974)는 점이 밝혀진 뒤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이스털린에 의해 밝혀진 내용은 이후 ‘이스털린 역설’로 명명되었는데, 이 역설의 등장은 행복에 관한 경제학계의 가정 혹은 설명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음을 시사한다.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이 역설을 설명하거나 분석하려는 시도와 함께 소득이나 소비 외에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이것은 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지만, 이 차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심리학의 설정값(set-point) 이론²⁾에 바탕을 둔 접근방식, 듀센베리(J. 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 등을 이용해서 소비의 사회적 차원을 중시하는 접근방식, 관계재(relational goods) 개념에서 비롯된 접근방식 등이 그것이다(김균, 2013, pp. 27-32). 이것들은 모두 행복을 물질적 생활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사례는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기존 경제학의 접근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급진적이다.³⁾

관계재 개념에서 비롯된 행복경제학은 브루니(L. Bruni)와 자마그니(S. Zamagni)

-
- 1) 이 글에서 ‘경제학’은 맥락에 따라서 ‘정치경제학’과 ‘경제학’으로 혼용되었지만, 그 의미는 경제학계의 주류 이론(‘주류 경제학’)을 지칭한다.
 - 2) 설정값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유전적 요인 등에 힘입어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환경조건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행복수준이 소득이나 소비수준과 무관한 것이 된다.
 - 3) 최근 국내에서도 행복경제학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계재에 바탕을 둔 접근방식을 소개하는 사례가 많다(김광수, 2018; 김균, 2013; 한재명·류재린·김균, 2015; 박종현, 2016; 이병천, 2007).

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들은 고대 서양철학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⁴⁾ 전통을 자신들의 논의의 기원으로 제시한다. 관계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에서 생산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할 경우에만 소비될 수 있는, 그래서 개인 혼자서는 생산과 소비가 불가능한 재화이다. 이것은 시장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하는 가운데 생산되거나 소비될 수 있으며, 그래서 시장경제가 확대될수록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제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계제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비시장 영역이 요구된다. 관계제 맥락에서 행복경제학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 바깥에서 관계제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경우, 행복은 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생산·소비 가능한 관계제의 문제로 이해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부로 포함하는 경제학을 기존의 경제학과 구별해서 시민경제학(civil economy)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시민경제학은 좁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 경제학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영역을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부로 고려함으로써 경제행위에 대한 관점을 확장함과 동시에 그 의미 또한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시장 바깥에서 관계제를 생산·소비하는 영역(이른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사익추구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시장경제가 작동될 경우 비시장 영역이 축소되기가 쉽다는 점이다. 이는 곧

4) 에우다이모니아는 훌륭함 또는 완전함을 뜻하는 ‘eu’와 수호신, 영혼, 신적인 힘, 운명 등을 가리키는 ‘daimon’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간이 최대한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신성과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 논의에서는 이 말이 흔히 사람의 본성과 가능성에 기반을 둔 탁월한 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을 삶에서 가장 고귀한 목표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박성호, 2017, pp.72-73).

5) 사회적 경제는 “민간 영리부문에도 속하지 않고 공공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조직과 기업”(Defourny, Hulgard and Pestoff, 2014, p.1), 즉 ‘제3부문’(third sector)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된다.

시민경제학의 존립가능성이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공존과 조화의 가능성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두 영역의 공존과 조화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행복경제학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학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행복과 사회적 경제의 상관성 논의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인 셈이다.

II. 관계재와 행복의 역설

1. 에우다이모니아 전통과 관계재

브루니에 따르면, 행복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크게 쾌락주의적 행복관과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관으로 구분된다. 전자에서는 행복이 물질적 욕구충족행위의 결과인 심리상태(쾌락, 효용 등)로 이해된다면, 후자에서는 행복이 인간관계나 내재적 동기와 같은 비물질적 목표와 관련된다. 쾌락주의(hedonism)가 벤담(J. Bentham)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⁶⁾ 에우다이모니아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다(Bruni, 2010, p.391).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전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행복을 물질적 욕구충족행위와 관련된 선호 또는 효용의 문제로 이해한다(김균, 2013, p.33).

관계재 이론은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을 계승한다. 브루니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 즉 ‘에우다이모니아로서의 행복’(happiness as eudaimonia)은 인생의 궁극 목적이자 ‘최고 선’(highest good)이다. 행복은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될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족적(self-sufficient)이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즉 비도

6) 쾌락주의(Hedonism)는 종종 에피쿠로스주의(Epicureanism)로 불리워질 정도로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Epicurus)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쾌락주의는 벤담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에피쿠로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브루니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 쾌락주의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관과 쾌락주의적 행복관의 차이가 브루니의 설명과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역량 상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구적(non-instrumental)인 궁극 목적이다.⁷⁾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이러한 행복은 덕성(virtue)⁸⁾ 또는 탁월성(excellence)으로 번역되는 아레테(arete)⁹⁾와 분리 불가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Bruni, 2010, p. 392). 여기서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해 실현가능한 최선의 목적으로서, 인간이 노력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 나아가 삶의 방식 그 자체와 관련되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덕행 또는 생활양식을 습관화해서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박성호, 2017, pp. 6-68).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아레테는 바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최고선)으로서 이른바 좋은 삶(good life)으로 옮겨질 수 있다. 여기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 즉 인간의 고유한 기능(ergon, function)이 전부 발현되는, 그래서 삶의 궁극적 목적이 완성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편상범, 2015, pp. 99-100), 이것은 덕성, 그 중에서도 특히 우정, 사랑, 정치참여 등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 좋은 삶이란 덕성을 충실하게 실현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삶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에우다이모니아 전통은 외부 대상을 중시하는 쾌락주의 전통과 구별된다. 이와 관련해서, 너스봄(M. Nussbaum)은 우정, 사랑, 정치참여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기본적인 관계재¹⁰⁾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관계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에우다이모니아의 일부이자 오직 호혜성(reciprocity) 속에서만 향유가능한 것이다.

7)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7장에서 최고선을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궁극 목적이 된다(Aristoteles, 1894, pp. 27-29).

8) 'virtue'는 맥락에 따라 '덕'이나 '덕성'으로 옮겨질 것이다.

9) 아레테가 덕성으로 번역될 경우, 이 말은 도덕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레테를 모든 사물이나 사람의 탁월성을 평가하는 의미로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아레테는 사물이나 사람이 무엇을 잘 함 또는 제각기 특유한 활동의 잘함을 의미한다(박성호, 2017, p. 68). 이와 같이 '아레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덕성'이나 '탁월성'으로 옮길 것이며, 둘 중 어느 하나로 옮기기 힘든 경우에는 '아레테'로 표기될 것이다.

10) '관계재'라는 표현은 너스봄의 1986년 저작(*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에서 처음 사용되었다(Bruni, 2010, p. 394).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덕성은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이는 오직 전자(덕성)가 비도구적인 방식으로 후자(행복)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내재적 선(intrinsically good)으로서 내부화(internalized)되는 경우에만 덕성이 행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덕성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될 경우 그것은 이미 덕성이기를 그치게 되며, 그래서 행복은 다양한 덕행의 간접적 결과, 즉 부산물일 수밖에 없다(Bruni, 2010, pp. 392-393). 그러므로 그의 철학에서 에우다이모니아 또는 좋은 삶은 부나 건강과 같은 좋음(goods) 외에, 우정, 사랑, 정치참여 등의 아레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정, 사랑, 정치참여 등의 아레테는 사회성(sociality) 또는 호혜성 속에서만 비로소 향유될 수 있는 관계재이므로, 에우다이모니아로서의 행복은 공동체적 관계 내지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호혜적) 교류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셈이다(김균, 2013, pp. 33-34).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론에서, 아레테, 즉 덕성은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덕성이 이성의 활동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덕성의 습관화 과정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인식하는 지적 판단 능력, 즉 실천적 지혜(phronesis)¹¹⁾의 함양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덕성의 함양과 실천적 지혜의 획득은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함께 가는 과정이다(편상범, 2015, pp. 112-113). 이렇게 볼 경우,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삶은 이성의 활동을 통해 덕성(혹은 탁월성)을 이끌어내고 발휘하는 삶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용, 즉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그에게 좋은 삶은 쾌락, 명예, 부 등을 향한 욕망이 습관을 통해 형성된 덕성, 즉 중용으로서의 덕성에 힘입어 순화될 때 비로소 달성가능한 것이 된다(박종현, 2016, pp. 95-98). 이와 같이 그는 덕성 혹은 탁월성을 중용, 즉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놓인 것으로 정의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6장에서, 그는 덕성 또는 탁월성에 대해 그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그것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11)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6권에서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와 철학적 지혜인 소피아(sophia)를 구분한다. 소피아가 보편적 진리에 관한 추론을 포함한다면, 프로네시스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후자는 전자와 달리 보편성보다 개별성을 중시한다. 그는 가정경제(oikonomia), 입법(nomothesia), 정치술(politike)을 이러한 프로네시스의 사례로 꼽는다(Aristoteles, 1894, pp. 207-220).

있게 하는 것¹²⁾으로서 중용을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된다(Aristoteles, 1894, pp. 63-67).¹³⁾

2. 관계재의 특징과 행복의 역설

브루니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만 비로소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관계재는 호혜성이라는 특성 외에 무상성 (gratuitousness)이라는 특성 또한 갖는다.¹⁴⁾ 후자의 특성은 관계재가 재화이지만 상품은 아니며, 가치는 있지만 시장가격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관계재는 그 어떠한 외재적 동기(경제적 이유, 이해관계 등) 때문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s) 때문에 재화로 존재할 수 있다. 관계재는 그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존재하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재화로 존재하며, 관계 자체가 곧 재화일 때, 그래서 이해관계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무상성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재는 재화로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우정이나 사랑 같은 관계재는 그 자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만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존재한다면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 우정이나 사랑이 아니다(Bruni and Zamagni, 2007, pp. 239-244).

물론 관계재가 시장가격이 없는 무상의 재화이며,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

1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눈의 아레테(즉 탁월성)는 눈과 눈의 기능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 우리는 눈의 아레테에 의해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아레테에 힘입어, 좋은 인간이 되며, 그것에 의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Aristoteles, 1894, p. 63).

13)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7-8장에서 중용으로서의 아레테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려움이나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용기가 중용이며, 즐거움이나 고통과 관련해서는 절제가 중용이고 무절제가 지나침이며, 돈을 주고받는 일과 관련해서는 자유인다움이 중용이고 낭비와 인색이 각각 지나침과 모자람이라고 주장한다(Aristoteles, 1894, pp. 67-68).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성향이 있는 바, “그 중 둘은 악덕으로서 하나는 지나침에 따른 악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자람에 따른 악덕이다. 나머지 하나가 중용이라는 탁월성의 성향이다”(Aristoteles, 1894, p. 72).

14) 관계재는 생산과 소비가 기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보통의 재화와 달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시성 (simultaneity),이라는 특징 또한 갖는다(Bruni and Zamagni, 2007, p. 243).

품이 아니라고 해도 무료로 이용가능한 자유재는 아니다. 경제학에서 재화는 자유재와 경제재로 구분되는데, 이는 모두 희소성 조건의 성립 유무에 따른 것이다.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그 충족 수단이 질적·양적으로 유한하거나 부족한 상태를 지칭하는데, 자유재(공기, 물, 햇빛 등)는 이러한 희소성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경제재는 희소성 조건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용가능하다. 관계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은 다른 상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또는 그 만큼의 개인소득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확보된다. 이와 같이 관계재는 소득포기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획득가능한 것이므로 희소한 재화, 즉 경제재에 해당된다(김균, 2013, pp. 35-36).

그렇지만 관계재는 시장 외부에서 생산되거나 향유되는 반면, 일반 상품은 시장 내부에서 등가교환의 원리에 따라 생산되거나 교환된다. 시장 영역에서 개인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며, 이것이 거시적인 맥락에서는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으로 귀결된다. 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증대됨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감 또한 증대되겠지만, 이러한 시장 영역의 확대는 개인들이 시장 외부에서 관계재를 생산·소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축소시킬 것이다. 시장 내부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과 시장 외부에서 생산·소비되는 관계재 사이에 일종의 구축효과가 작동되는 셈이다(Maggiolini and Nanini, 2007, p. 4). 이는 곧 관계재가 이스털린의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경제를 이용한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가 한편으로는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재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축소시켜 행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시장참여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과 교류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여유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재의 축소는 물질적 소득 향상이나 소비증대에서 비롯된 즐거움을 상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이는 곧 시장경제의 확대가 행복의 중요 요소인 인간 간 상호교류, 즉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시간을 감소시키고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계재 개념이나 이와 관련된 행복경제학은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내포한다(김균, 2013, pp. 36-37).

호혜성과 무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재는 비시장 영역에서 생산·향유되는 재

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상품교환관계와 관계제 사이에 상호배타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교환에도 관계제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관계제의 생산 및 소비에도 상품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골’ 관계라는 호혜적 관계제가 상품 거래에서 일종의 신뢰 자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상품교환이 인간관계인 한 그 과정에서도 관계제의 생산 및 소비가 수반되고, 관계제의 생산 및 소비에서도 상품교환의 원리인 등가원리가 부수적으로 동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 맥락에서 경제 전체가 등가교환 원리에 따라서만 작동되는 시장경제인지, 아니면 호혜성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사회적 경제 등의 영역이 포함된 시장경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혜성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사회적 경제의 포함 여부에 따라 사회 전체의 웰빙(well-being)이나 행복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균, 2013, pp. 37-39).

Ⅲ. 시민경제학과 행복

1. 시민경제학과 사회적 경제

브루니와 자마그니에 따르면, 사회질서가 조화롭게 유지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가교환, 재분배, 호혜성이라는 3가지 규제원칙이 필요하다. 등가교환 원칙의 목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면, 재분배의 목적은 공정성(fairness)이다. 호혜성의 목적은 사회 연결망(social nexus), 즉 사회적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에우다이모니아로서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궁극적으로 박애(fraternity)로 요약된다(Bruni and Zamagni, 2007, pp. 19-21).

이들은 시장교환이 원래 등가교환만이 아니라 재분배나 호혜성에도 의존했지만,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완성되면서 호혜성 원칙이 약화되었으며, 그래서 오늘날 사회질서는 등가교환과 재분배 원칙에만 의존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좋은 사회(good society)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원칙만이 아니라 박애의 원칙까지 작동되는 곳이며, 이렇게 3가지 원칙에 기대어 세워지지 않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시장은 신뢰가 중요한데, 이 신뢰의 토대는 호혜성에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행위 속에 인간의 사회성, 호혜성, 박애의 의미를 복원하고자

노력한다(Maggiolini and Nanini, 2007, pp.1-2).

이들은 3가지 사회 규제원칙(등가교환, 재분배, 호혜성)이 하나의 사회 안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시민경제학으로 정의한다. 기존의 경제학은 시장의 등가교환 기능과 정부의 재분배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시민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은 호혜성에 있는 셈이다(Bruni and Zamagni, 2007, pp.22-25). 시민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이 공정성 원칙에 입각한 재분배 방식만이 아니라 박애 원칙에 입각한 호혜성 메카니즘 또한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경제를 인간화하고 인간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사이에 시민 덕성(civic virtue)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Maggiolini and Nanini, 2007, pp.6-7).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등가교환, 재분배, 호혜성을 3가지 규제원칙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서 공존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폴라니의 경제관과 비슷하다. 익히 알다시피, 폴라니는 3가지 경제통합 형태(시장교환, 재분배, 호혜성)와 그 지지구조(supporting structure)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통합 형태는 크게 호혜성, 재분배, 시장교환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호혜성은 대칭성을, 재분배는 중심성을, 교환은 시장체계를 각각의 지지구조로 확보하고 있다(Polanyi, 1977, pp.36-43). 그는 시장교환을 비시장적 요인으로부터 독립된, 그래서 독자적인 자기조정 능력을 지닌 영역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시장교환이 호혜성이나 재분배와 같은 비시장적 요인에 의존하고 있음(이른바 ‘embeddedness’)을 보여준다.¹⁵⁾

그렇다고 해서,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폴라니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시장과 효율성 논리의 확장을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기는 견해와 시장의 확대를 시민생활의 위협으로 여기는 견해를 구분한 후, 전자의 사례로 자유주의를, 후자의 사례로 맑스(K. Marx), 폴라니를 각각 제시한다. 전자에서는 기업이 비사회적 제도(asocial institution)로 여겨지며, 사회적 차원은 시장 메카니즘으로부터 구분되는 실체이고, 시장은 윤리나 사회로부터 중립적인 제도이다. 반

15) 장원봉은 사회적 경제 논의에 대해 경제의 재사회화 혹은 재포섭(reembeddedness)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믿음 혹은 판단의 등장은 지속적으로 ‘경제’라는 영역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려는(disembedded) 시도를 동반하는 바, 사회적 경제는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해서 경제행위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태된 것이므로 이 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재정립(reembeddedness)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경향들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장원봉, 2007).

면, 후자에서는 기업이 본질적으로 반사회적(antisocial)인 존재로 여겨지며, 시장은 비인간화 자체로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파괴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전자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정신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을 정치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긴다면, 후자에서는 ‘시장이 필요악으로 여겨지므로 시민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Bruni and Zamagni, 2007, pp. 16-17). 이들은 이러한 두 견해에 대해 각각 신자유주의 관점과 신국가주의 관점(neoliberal and neostatist statues)으로 정의한 후, 시민경제학을 두 관점의 대안으로 제시한다.¹⁶⁾ 이와 같이 이들은 폴라니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면서도, 폴라니의 관점을 신국가주의로 분류하면서 시민경제학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¹⁷⁾ 이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신국가주의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Bruni and Zamagni, 2007, pp. 217-218), 폴라니 역시 복지국가 모델과 비슷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¹⁸⁾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신국가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시민경제학을 통해, 시장이나 정부가 아닌 제3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들에 따르면, 시민 경제학의 중심 아이디어는 인간의 사회성과 호혜성을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핵심요소로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경제학은 이윤과 도구적 교환(instrumental exchange) 이외의 원칙이 경제 활동 내부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시장과 경제에 대해 오로지 등가교환의 원칙에만 기반을 둔,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신자유주의)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경제학은 신국가주의에 의해 제기되는 관점, 즉 무상성(gratuity)과 호혜성을 시민생활의 다른 영역(즉 비경제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관점 또한 넘어서고 있다(Bruni and Zamagni, 2007,

16) “시민경제학은 신자유주의 관점과 신국가주의 관점(the neoliberal and the neostatist statues) 모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Bruni and Zamagni, 2007, p. 14).

17)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폴라니에 대해 맑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른바 ‘신국가주의자’)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아마도 이들은 폴라니가 맑스와 차이를 보이면서도 시민의 자율성이나 여기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반면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이해하는 듯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이해방식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18) 아마도 여기에는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암묵적인 판단, 즉 폴라니가 3가지 경제통합 형태(시장교환, 재분배, 호혜성)를 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의 역할(재분배) 중심으로 경제통합을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놓여 있는 듯 보인다.

pp. 17-19).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볼 때, 시민경제학은 세 가지 사회규제원칙(등가교환, 재분배, 호혜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¹⁹⁾은 등가교환과 재분배만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시민경제학은 시장 메카니즘 내부에 효율성, 형평성, 호혜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에 비해 포괄적이며, 그래서 시민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 아담 스미스에 의해 (정치)경제학이 등장하면서 세 번째 사회규제원칙인 호혜성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물론 오늘날에도 경제학자들은 호혜성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지만, 호혜성이나 박애를 분석할만한 수단이 경제학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자마그니는 경제학이 호혜성을 간과함으로써 휴머니즘적 주제(a humanistic subject)로서의 특징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Zamagni, 2009, p. 4).

한편 자마그니는 최근에 시민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3가지 요인을 제시한다. 불평등, 이스털린의 역설, 기업조직 관련 요인 등이 그것이다.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경우, 경제가 지속될 수 없으므로 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스털린에 따르면, 일인당 소득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행복 지수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설이 사람들을 시민경제학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한다. 기업조직의 경우, 오늘날 전통적인 기업조직방식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에는 지식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암묵지(tacit knowledge)가 특히 더 중요하다. 암묵지는 명시적인 언어나 규칙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호혜성 원칙이 필수적이다. 이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 한 암묵지가 작동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암묵지를 매개로 한 창조와 혁신의 가능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Zamagni, 2009, pp. 7-9). 자마그니에게 시민경제학은 시장이나 정부가 아닌 제3의 대안으로서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 셈이다.²⁰⁾

19) 경제학의 출발점은 1776년에 출간된 아담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이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른바 ‘신고전파 경제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경제학’을 지칭하는 용어는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었다.

20) 자마그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2. 사회적 경제와 행복

브루니와 자마그니에 따르면, 시민경제학은 고대 사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출발점은 시민 휴머니즘(civil humanism)과 이탈리아 계몽주의이다. 시민 휴머니즘은 15세기에 이탈리아(와 플랑드르)에서 도시문명 모델이 발전하던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인간의 관계 차원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사회적 덕성(social virtue)만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덕성으로 인정되며, 그래서 도시공동체(civitas)에서는 사회적 행복(social well-living)이 중시된다. 이탈리아 계몽주의는 18세기 밀라노 학파(Beccaria Veri)와 나폴리 학파(Genovesi, Galiani, Vico) 시기에 나타난 것²¹⁾으로서, 공공의 행복(public happiness)을 중시하며, 공적 신뢰(public trust)와 시민 덕성을 이러한 행복의 조건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근대사회는 공공의 행복이나 시민 덕성(또는 사회적 덕성)을 중시하는 두 전통과 단절했는데, 여기에는 18세기에 선(goodness)을 제거한 시장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놓여 있으며 아담 스미스는 바로 이러한 방향을 대표하는 이론가였다(Maggiolini and Nanini, 2007, pp. 2-3).²²⁾

스미스 이후, (정치)경제학은 시장의 행위동기를 자기에(self-love) 혹은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개인들의 자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힘입어 공공선(public good)으로 전환되는 바, 경제학에서 시장이 상호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은 개인들의 의도와 무관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따르면, 상호이익(mutual interest)이 시장의 목적(telos)이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노베시(A. Genovesi) 등의 시민경제학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경제학²³⁾에서는 이기심이나 탐욕(greed)이 아니라,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Zamagni, 2018, pp. 153-154).

21) ‘시민경제학이라는 용어는 나폴리 대학(University of Naples)에서 창안되었다. 나폴리 대학은 1753년에 세계 최초로 경제학 교수직(a chair in economics)을 창설했는데, 세계 최초의 경제학 교수직은 시민경제학 교수(a chair in civil economy)였으며, 그 주인공은 제노베시였다(Zamagni, 2009, p. 6). 제노베시는 『시민경제학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작을 남기기도 했다.

22) 스미스는 『국부론』의 저자이자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의 저자로서, 경제학의 출발점은 전자가 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도덕감정론』 저자 스미스에 대해 제노베시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가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고 본다(이병천, 2007, p. 178).

상호이익을 목표로 한 경제행위가 시장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장의 덕은 호혜성에 기초하며, 시민사회의 다른 덕들(virtues)과 얹혀 있는 상황이다(Bruni, 2014, pp. 283-285). 이와 같이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이탈리아의 시민 휴머니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학이 발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제학이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학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탈리아 시민경제학으로 이어진 덕 윤리 전통을 수용할 경우 경제 행위를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 보기에, 오랫동안 경제학은 시장이 덕이 없는 영역(virtue-free zone)으로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 행위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설명방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덕 윤리에 바탕을 둔 관계재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복지수준은 물질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관계적 욕구(relational needs), 즉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도 연결된다. 사적재(private goods)는 관계적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없으며, 관계적 욕구는 관계재를 요구한다. 관계재는 일단 생산되면, 특정한 투입요소로서 사회의 모든 제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시장조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호혜성, 신뢰, 공감(sympathy) 등의 가치를 전제해야 하는 바, 이는 모두 관계재를 통해 실현가능한 가치들이다(Bruni and Zamagni, 2007, pp. 163-166).

브루니와 자마그니에 따르면, 호혜성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산출하는 가치 이전이 인간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호혜성이 작동될 때 거래의 대상은 행위 주체와 분리될 수 없으며,²⁴⁾ 호혜성은 동일한 가치의 보상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가교환에 비해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호혜성은 가치 이전의 양방향성(bi-directionality)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 방향 이전(unidirectional transfers)으로

23) 자마그니에 따르면, 시민경제학은 경제사상의 한 전통으로, 14-15세기에 시작되어 18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인 경제사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18세기 후반 이후 아담 스미스에게서 비롯된, 경제학(political economy)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Zamagni, 2009, p. 1). 그러나 김광수는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이 기본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서 호혜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시민경제론과 사회적 경제의 지성사적 기원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김광수, 2018).

24) “호혜성에 힘입어, 교환은 등가교환에서 확인되는 익명적이고 비인격적인(anonymous and impersonal) 측면에서 벗어난다”(Bruni and Zamagni, 2007, p. 167).

표현될 수 있는 이타주의(altruism)와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호혜성 개념은 이기심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경제학 이론으로도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다. 이 개념은 반복게임으로 이해될 수도 없는데, 게임은 덕 윤리 전통에서 비롯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²⁵⁾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보기에, 호혜성에 바탕을 둔 관계성은 개인주의만이 아니라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까지 거부한다.²⁶⁾ 여기서 관계 관점은 교환 관점이 아니라 호혜성 관점이다. 교환은 본성상 도구적이며, 그래서 교환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도구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호혜성

25) 이병천에 따르면, 시민경제론 또는 공공성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과제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진화적 게임이론(evolutionary game theory)에 기반을 둔 ‘새 정치경제학’ 논의와 에우다이모니아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행복경제학 논의가 그것이다. 양자는 모두 호혜성이라는 개념을 공유하면서, 이기심에 따라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형에 기초한 주류 시장경제학 체계의 극복을 지향하지만, 호혜성 개념의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진화적 게임이론에 기반을 둔 새 정치경제학 논의는 인간들 간의 협력 행동과 그에 기반을 둔 협력 시스템이 독특한 상호주의적 인간형(reciprocators)으로 부터 나타난다고 이해하지만, 협력 행동이 지향하는 목적 가치, 또는 인간의 욕구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행복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경제론의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행복경제학에서는 호혜성이 새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호혜성과 달리, 호혜적인 관계 자체를 좋은 삶을 위해 추구되어야 할 고유한 가치로 이해된다(이병천, 2007, pp. 174-179). 새 정치경제학 논의에서 호혜성은 주로 게임 참가자가 처음에는 협력하고, 그 이후에는 상대의 바로 전 전략에 따라 행동하는 전략(이른바 ‘Tit for tat’)에 따라 정의되는데, 이병천은 이러한 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울스(S. Bowles)를 꼽고 있지만, 정태인의 연구 또한 이러한 논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태인은 인간의 속성을 이기적 인간과 상호적 인간으로 구분한 후(정태인·이수연, 2013, pp. 39-42), 호혜성의 핵심을 이른바 ‘Tit for tat’ 전략에 따라, ‘남이 해주는 대로 나도 행동한다는 것’(정태인·이수연, 2013, p. 40)으로 정의한다.

26) 공동체주의는 맥킨타이어(A. MacIntyre), 샌들(M. Sandel), 왈처(M. Walzer) 등의 사상으로 대표되는데, 이들에 따르면, 정의(justice), 선(good), 덕성(virtue) 등 현실의 윤리 관념은 추상적 도덕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공동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윤리나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이론들(자유주의, 공리주의 등)은 모두 공동체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개인을 전제하지만,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욕구나 가치의 상당부분이 그가 성장한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며, 그래서 개인을 공동체의 산물로 정의한다(신정완, 2014, pp. 96-104).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관을 ‘덕 윤리’로 정의할 경우, 오늘날 이러한 ‘덕 윤리’(virtue ethics)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주의자가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맥킨타이어가 대표적이다(MacIntyre, 2007). 그렇지만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덕 윤리 전통으로 해석하고 이를 수용하면서도 공동체주의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관계는 ‘관계’의 힘(force of ‘between’)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영역으로서 관계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Zamagni, 2008, p. 479). 이들에 따르면, 개인주의 패러다임은 관계제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없다. 개인 간 관계는 선(the good)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주의는 독립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효용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행복에 이르는 빈곤한 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자아실현을 전제하는데, 여기서 자아실현은 상호 승인을 전제한다(Zamagni, 2008, pp. 483-485). 관계 차원의 경제학 담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의 특징인 전체주의적 접근(holistic approaches)의 문제나 개인주의적 환원주의(individualistic reductionism)의 뒷에서 벗어나 비도구적 호혜성 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Bruni and Zamagni, 2007, pp. 174-176).

자마그니는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과 함께 시민경제학이 정치경제학으로 대체됨과 동시에, 경제학의 목적 또한 공동선에서 전체선(total good)로 대체되었다고 본다. 자마그니에 따르면, 시민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궁극적인 차이는 경제학이 전체선을 추구하는 반면 시민경제학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 전체선은 개인선(individual good)의 총합 형태($g_1 + g_2 + g_3 + \dots$)로 나타난다. 이러한 총합은 구성원 중 어느 누군가의 선(good)이 0인 경우에도 총합이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효용의 논리이기도 한데, 효용분석의 아버지인 벤담에 따르면, 경제정책의 목표는 전체선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극대화는 누군가의 선이 0으로 줄어든 상황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공동선은 개인선들의 곱하기(product of individual goods) 형태($g_1 \times g_2 \times g_3 \times \dots$)로 나타난다. 이 경우, 어느 누군가의 선이 0이 될 경우, 공동선 또한 0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선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편익(benefit)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Zamagni, 2009, pp. 5-6).

그렇다고 해서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시민경제학에 대해 기존의 경제학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학에 시민경제 범주를 도입할 경우 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입은 기존 경제학의 인식영역을 넓혀주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시장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호혜적인 관계가 엄연히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경제학은 경제학의 설명력, 즉 인식영역을 넓혀주는 것이며, 그러므로 시민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

다(Bruni and Zamagni, 2007, p. 257).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자본주의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의 탄생 이후에 등장²⁷⁾ 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기업의 실패에 대한 대응책²⁸⁾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을 조금 더 진전된(more advanced) 사업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보여주지만, 후자에서는 협동조합이 노동을 단순히 하나의 생산요소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한 계기로 이해되며, 후자에서 자아실현은 협동양식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실천적 결론이 도출된다. 전자의 경우, 협동조합은 유용하고 효과적이지만, 일종의 틈새 기업(a niche position)으로 해석되며, 그래서 항시 규칙에 대한 예외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은 그 이면에 시장을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 조직을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취급하는 경우와 동일한 논리를 전제한다. 이와 달리 후자의 해석에서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기업이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업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해석은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내부에서 자본주의 기업을 보완해주는 조직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Zamagni, 2005, pp. 1-2).

IV. 행복과 사회적 경제, 그리고 시민경제학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학은 관계재 개념을 통해 행복과 경제학의 관계를 새롭게 설명한다. 아울러 이들의 행복론 혹은 행복경제학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27) 협동조합이라는 기업형태는 산업혁명 시기에 탄생했지만, 이것의 등장배경인, 서로 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존재했는데, 중세 도시의 동업자 조합인 길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Zamagni, S, and V. Zamagni, 2009, pp. 44-46).

28) 밀(J. S. Mill)은 맑스가 주도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협동조합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주의를 모색하기도 한다(김기순, 1980, p. 85). 밀의 사회주의는 시장의 경쟁과 소득의 불평등을 허용하는데(Mill, 2008, pp. 403-413), 이와 관련해서 브루니는 밀의 사회주의를 ‘자유 사회주의’(liberal socialism)로 정의하면서 재능이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등 소득 불평등을 허용한다고 설명한다(Baum, 2007, pp. 22-24).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기존의 복지정책은 대체로 사회구성원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즉 소득과 소비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바깥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관계재 개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곧 관계재 개념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이 소득과 상품소비의 확대를 넘어 시장 바깥의 관계재 생산 및 소비 영역으로까지 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균, 2013, pp. 21-22). 이와 같이 이들의 행복경제학, 더 나아가 시민경제학은 물질적 성장이나 개인주의적인 욕구충족 중심의 경제학, 복지정책을 넘어,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경제학 논의의 핵심 요인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들의 시민경제학 논의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이들은 시민경제학을 3가지 사회 규제원칙(등가교환, 재분배, 호혜성)을 모두 고려하는 의미로 정의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시민경제학에 대한 광의와 협의의 정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맥락에서, 이들은 시민경제학의 기원을 이른바 시민사회라 불리워지는 중간세계(middle earth)로 정의하면서 이 세계는 시장과 국가, 또는 개인과 국가와 모두에 대해 고유의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Bruni and Zamagni, 2007, p. 27). 때로는 '사회적 경제를 시민사회조직, 제3부문, 비영리조직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과 동의어로 설명하기도 한다(Bruni and Zamagni, 2007, p. 9), 이들은 시민경제학을 사회적 경제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는 것(광의)으로 정의하면서도 사회적 경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협의)으로 정의하기도 하는 셈이다. 사회적 경제 혹은 제3부문이 3가지 사회규제 원칙 중 호혜성에 해당되는 영역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넓게 보면 등가교환, 재분배, 호혜성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이지만, 좁게 보면 호혜성에 집중하는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개념의 이중성 문제는 논의의 초점에 따른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시민경제학 개념에 관한 의문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 따르면, 시민경제학은 호혜적인 인간관계와 함께 이 관계를 매개로 한 공공의 행복이나 시민 덕성(또는 사회적 덕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민경제학은 이미 산업혁명 이후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학에서 호혜성 원칙이 관심 범위에서 사라지고 사회경제질서가 등가교환과 재분배 원칙에만 의존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²⁹⁾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학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불평등, 이스털린의 역설 등)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호혜성 원칙까지 고려하는 시민경제학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시민경제학은 이기심과 효율성에 바탕을 둔, 그래서 등가교환과 재분배 원칙만이 작동되는 경제 영역(기존 경제학의 주제)에다 호혜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추가해서 두 영역 사이의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시민경제학의 복원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도 인정하듯이, 산업혁명 이후 ‘경제학에서 호혜성 원칙이 관심 범위에서 사라’졌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호혜성 원칙을 구축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곧 이들의 논의를 수용할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호혜성 원칙까지 포함된 시민경제학의 복원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밀려 약화되거나 사라졌던 호혜성 원칙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상황에서 되살릴 방법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들은 시민경제학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할 뿐,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답변도 제공하지 않는다(이병천, 2007, pp. 180-181). 이는 곧 이들의 시민경제학이 이상적인 경제학 이론이나 모형으로서는 수용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시민경제학이 지닌 한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3가지 규제원칙을 증시하는 데에는 폴라니의 영향이 놓여 있다. 사실상 폴라니는 오늘날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참조하는 인물 중 하나일 것이다.³⁰⁾ 아마도 여기에는 폴라니가 시장 영역과 시장 외부 영역의 상호관계 혹은 공존 필요성을 강

29) 자마그니에 따르면, 시민경제학 개념은 19세기 초에 공적 논의에서 사라졌으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리주의 철학이 확산되면서 경제인(homo oeconomicus) 모델이 경제학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과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가 출현했다는 점이 그것이다(Zamagni, 2018, pp. 158-159).

30) 예를 들어, 드푸르니(J. Defourny)는 오늘날 ‘사회적 경제의 선도 연구자’(송백석, 2011, p. 8)로 평가되는 인물인데, 그의 사회적 경제론에서도 폴라니의 견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드푸르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동태적 접근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국가, 민간 영리부문, 공동체를 상호관계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 재분배, 호혜성의 공존 혹은 조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시장이 민간 영리부문의 영역이라면, 재분배는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며, 호혜성은 대칭성(symmetry)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가족 관계가 대표적이다(Defourny and Nyssens, 2012, pp. 10-13).

조한다는 사실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시민경제학의 구성요소인 3가지 규제원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폴라니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면서도 이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이들이 보기에, 폴라니의 관점은 신국가주의로서 시민경제학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신국가주의를 대표하는 사례로 제시하는데, 아마도 여기에는 이들의 시민경제학이 사회적 경제라는, 시장이나 정부가 아닌 제3의 대안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사실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공공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¹⁾ 그렇지만 과연 폴라니의 견해를 신국가주의로 볼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폴라니의 견해조차 신국가주의로 비판할 정도로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혜성 원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힘에 밀려난 데다 후자의 논리가 여전히 경제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호혜성 원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영역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의 준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끊임없는 팽창 논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민경제학 논의에서는 이러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곧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의 시민경제학 논의가 현실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³²⁾

이들은 사회질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등가교환, 재분배, 호혜성이라

31)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복지모델을 비교하면서, 신국가주의 모델(neostatist model)과 시민복지 모델(civil welfare model:)을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에서는 국가가 복지 서비스 공급을 독점한다면, 후자에서는 시민사회조직이 복지서비스 공급의 적극적인 행위 주체가 된다(Bruni and Zamagni, 2007, pp. 215-222). 이들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복지 모델을 증시하는 셈이다.

32) 물론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Hall, P. A. and D. Soskice, 2001)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의미나 중요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사회적 경제의 조화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호혜성 원칙을 구축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말할 뿐, 이 효과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는 3가지 규제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3가지 규제원칙의 목적을 각각 효율성, 공정성, 박애로 정의한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호혜성 원칙의 목적으로 제시한 박애(fraternity)의 의미를 연대(solidarity)와 구분해서 설명한다. 이들이 보기에, 박애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하나의 표어(banner)로 제시되었지만, 이후 연대와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그 의미가 오용되고 있다. 그러나 박애는 인격적 관점(personal perspective)을 전제한다면, 연대는 비인격적 관점과 양립가능하다. 연대는 추상적인 공동체를 고려하므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박애는 호혜적인 관계를 전제하므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박애는 반온정주의적(anti-paternalistic) 특징을 보이는 반면, 연대는 온정주의를 포함하며, 박애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동일성을 강조하기보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반면 연대는 동일성을 강조한다(Bruni and Zamagni, 2007, pp. 20-21).³³⁾

자마그니에 따르면, 박애 원칙은 연대의 원칙을 보충함과 동시에 넘어선다. 연대는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사회 조직의 원칙이지만, 박애는 평등을 다양하게 만드는 사회 조직화 원칙(the principle of social organization that allows equals to be diverse)이다. 박애는 존엄성과 기본권이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의 계획을 가진 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19세기 이후, 특히 20세기에는 연대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문화적, 정치적 투쟁이 나타났는데, 노동 운동과 시민권 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연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실상 모든 박애 사회는 연대 사회이지만, 그 역까지 성립하지는 않는다. 관계재의 특성인 무상성(gratuitousness)은 과잉(overabundance)을 전제하며, 박애 원칙에 기반을 둔

33) 이와 관련해서, 자마그니는 시민적 시장경제(the civil market economy)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the capitalist market economy)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16세기부터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적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점차 자본주의가 공동선의 논리를 전체선(the total good)의 논리로 대체하기 시작하고, '이윤 동기'(the 'profit motive')가 모든 경제활동을 지배하게 되었다(Zamagni, 2018, pp. 155-157). 그는 근대(modern times)의 경제관을 지배하는 인물로 홉스(T. Hobbes), 맨드빌(B. Mandeville), 스미스, 벤담을 꼽으면서, 전근대사회에서는 덕 윤리가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었지만, 홉스/맨드빌/스미스/벤담의 사고방식(the Hobbes/Mandeville/Smith/Bentham line of thought) 이후로는 덕 윤리가 중세 기독교의 유산으로 평가되면서 제거되었으며, 이후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이 인간의 경제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Zamagni, 2018, pp. 157-158).

사회에서는 이러한 과잉의 논리가 작동된다. 이러한 박애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의 희망이 없으며, 등가원칙에 따라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사회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교환의 대상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세계관(liberal-individualist worldview)이나 모든 것이 의무인 국가중심적 사회관(state-centric view of society)으로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Zamagni, 2018, pp.165-166).

이와 같이 이들은 박애와 연대를 구분하면서 전자를 시민의 자발성과 호혜적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들에게 연대는 추상적인 공동체를 고려하고 다양성보다 동일성을 강조하지만, 박애는 시민의 자발성이나 호혜적 관계를 고려하며 동일성보다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박애와 연대가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해도, 전자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남는다. 자마그니는 박애 원칙의 기원을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사고방식(Franciscan thought)에서 찾는다(Zamagni, 2018, p.166). 그는 시민경제학의 출발점을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찾기도 한다. 그는 이 수도회가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제도체계를 창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체계의 목적을 공동선으로 정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Zamagni, 2009, pp.4-5). 이러한 자마그니의 견해를 수용할 때, 시민경제학의 등장 배경인 시민 휴머니즘은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민경제학을 구성하는 3가지 규제원칙 중 하나인 박애 원칙 또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근대사회에 출현한 연대 원칙과 중세 수도원에서 비롯된 박애 원칙의 구분이 충분히 타당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두 원칙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도, 중세에 자그마한 수도원이나 수도회 또는 공동체 내부에서 작동되던 박애 원칙을 오늘날처럼 거대한 조직이나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박애 원칙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이 원칙에 바탕을 둔 호혜성이나 사회적 시장경제의 현실적 타당성 또한 높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는 박애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 측면에서 이 원칙의 적용 비율이 높지 않다면, 이 원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힘에 밀려 사라지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박애 원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원칙이 사회 전체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 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연대와 박애 사이에도 서로 구별되는 요인만큼이나

중첩되는 요인 또한 존재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박애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이 원칙이 3가지 규제원칙 중 하나로써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의 도움이 필요한 셈이다. 이는 곧 이들의 시민경제학에서 연대와 박애의 공존 혹은 조화의 가능성 또한 매우 중요한 조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이와 같이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학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 경제학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한 관점을 확장함과 동시에 그 의미 또한 근본적으로 바꿔보고자 노력한다. 다만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중시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사익추구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는 곧 시민경제학의 현실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공존 혹은 조화의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제에 바탕을 둔, 이들의 행복에 관한 논의 또한 두 영역의 공존 혹은 조화의 가능성에 따라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인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민경제학 논의에서 두 영역의 공존 또는 조화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중세의 조그만 수도원 공동체에서 비롯된 박애 원칙을 오늘날처럼 비대해진 사회조직이나 공동체에 과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설령 적용가능하다고 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탐욕이 이 원칙의 복원가능성을 허용할지 의문이다. 이들도 인정하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박애 원칙이 작동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복원을 허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대안을 모색한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탐욕을 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자발성만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팽창 메커니즘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호혜성 원칙을 포함하는 시장경제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좋은 품성’이 어떻게 육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답변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이상적인 경제학 또는 경제 모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들의 시민경제학은 관계제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의 이론적, 현실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시민경제학의 한계는 곧 이들의 행복경제학이 안고 있는 한계일 수 있다. 이는 곧 이들의 행복경제학 논의의 타당성 문제가 좁은 의미에서는 행복과 사회적 경제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연결되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조화 혹은 공존의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의 시민경제학 논의에서 두 영역의 조화 혹은 공존의 현실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시민경제학의 의미나 중요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제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행복경제학의 이론적 배경인 시민경제학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경제학의 한계는 브루니와 자마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에 가깝다. 과연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조화 혹은 공존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이 과제의 해결가능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관계제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어떻게 복원, 확산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며, 바로 이 점이 이들의 행복경제학, 더 나아가 시민경제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과제일지도 모르겠다.

■ 참 고 문 헌

1.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행복이론: 행복경제학과 시민경제론의 기원,” 『경제학연구』, 제66집 제1호, 2018, pp.33-80.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 Su, “Adam Smith’s Theory of Happiness: An Origin of Happiness Economics and Civil Economy,”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66, No. 1, 2018, pp.33-80.

2. 김 균, “이스털린 역설과 관계제,” 『사회경제평론』, 제42호, 2013, pp.19-48.

(Translated in English) Kim, Kyun, “Easterlin Paradox and Relational Goods,”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s Studies*, No. 42, 2013, pp.19-48.

3. 김기순, “J. S. Mill의 사회주의론,” 『서양사론』, 제21권, 1980, pp.83-115.
(Translated in English) Kim, Ki Soon, “J. S. Mill’s Theory of Socialism,” *The Western History Review*, Vol. 21, 1980, pp.83-115.
4. 박성호,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제141집, 2017, pp.62-84.
(Translated in English) Park, Sung-Ho, “A Study on the Aristotle s Eudaimonia,”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41, 2017, pp.62-84.
5. 박종현, “행복경제학과 ‘좋은 삶’ 전통,” 『延世經濟研究』, 제23권 제1호, 2016, pp.79-102.
(Translated in English) Park, Jong Hyun, “Happiness Economics and Eudaimonic View of Happiness,” *Yonsei Economic Studies*, Vol. 23, No. 1, 2016, pp.79-102.
6. 송백석, “사회적 경제모델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 『공공사회연구』, 제1권 제2호, 2011, pp.5-32.
(Translated in English) Song, Baek Seok, “Social Economy Model and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Journal of Public Society*, Vol. 1, No. 2, 2011, pp.5-32.
7. 신정완, 『복지국가의 철학』, 인간과복지, 2014.
(Translated in English) Shin, Jeong Wan, *Philosophy of the Welfare State*, Seoul: Human and Welfare Press, 2014.
8. 이병천, “상호성과 시민경제론의 두 흐름,” 『시민과 세계』, 제12호, 2007, pp.173-182.
(Translated in English) Lee, Byung Chun, “Reciprocity and Two Flows of Civil Economy,” *Citizen and The World*, No. 12, 2007, pp.173-182.
9. 장원봉,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2007, pp.5-34.
(Translated in English) Jang, Won Bong, “The Alternative Conception of the Social Economy: Issues and Challenges,” *Civil Society and NGO*, Vol. 3, No. 2, 2007, pp.5-34.
10. 정태인 · 이수연,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주)래디앙미디어, 2013.
(Translated in English) Jung, Tae In and Soo Yun Lee, *Jung Tae In’s Economics of Cooperation*, Seoul: Radian Media Press.
11. 편상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행복, 욕구 만족, 그리고 합리성,” 『철학사상』, 제58호, 2015, pp.95-126.
(Translated in English) Pyeon, Sang Beom, “Happiness, Desire-satisfaction, and Rationality in Aristotle’s Ethics,” *The Philosophical Thought*, No. 58, 2015, pp.95-126.
12. 한재명 · 류재린 · 김 균, “관계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제46호, 2015, pp.103-141.
(Translated in English) Han, Jae Myung, Jaerin Ryu and Kyun Kim, “Effects of Relational Goods on Happiness in Korea,” *Review of Social & Economics Studies*, No. 46, 2015, pp.103-141.
13.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1894, 강상진 · 김재홍 · 이창우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길, 2011.
14. Baum, B., “J. S. Mill and Liberal Socialism,” in N. Urbanati & A. Zacharas(eds.) *J. S.*

- Mill's Political Thought: A Bicentennial Reassessment*, Cambridge Univ., 2007.
15. Bruni, L., "The happiness of Sociality. Economics and Eudaimonia: A Necessary Encounter," *Rationality and Society*, Vol. 22, No. 4, 2010, pp. 383-406.
 16. _____, "The Telos of the Market and Civil Economy," *Studies in Emergent Order*, Vol. 7, 2014, pp. 273-287.
 17. Bruni, L. and S. Zamagni, *Civil Economy-Efficiency, Equity, Public Happiness*, Peter Lang, 2007.
 18. Defourny, J. and M. Nyssens, "The EMES Approach of Social Enterpris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WP no. 12/03, 2012.
 19. Defourny, J., L. Hulgard and V. Pestoff, "Introduction to the 'SE Field'," in J. Defourny, L. Hulgard & V. Pestoff(ed.), *Social Enterprise and the Third Sector*, Routledge, New York, 2014, pp. 1-14.
 20. Easterlin, R.,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 M. W. Rede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Academic Press, Inc., New York, 1974.
 21. Hall, P. A. and D. Soskic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 2001.
 22. MacIntyre, A., *After Virtue*, 3rd Edition, Univ. of Notre Dame Press, Indiana, 2007.
 23. Maggiolini, P. and K. Nanini, "Ethical Meaning of the Re-emerging Thought about Civil Economy: in Italy," XV Congreso Nacional de Ética de la Economía y de las Organizaciones, Barcelona, 2007, pp. 1-9.
 24. Mill, J. S., "Chapters on Socialism," in J. Riley(ed.),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Chapters on Socialism*, Oxford Univ., 2008.
 25. Polanyi, K., *The Livelihood of Man*, (ed. by W. Pearson), Academic Press, New York, 1977.
 26. Zamagni, S., "Reciprocity, Civil Economy, Common Good," in M. S. Archer & P. Donati(eds.), *Pursuing the Common Good: How Solidarity and Subsidiarity Can Work Together*, Pontifical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tican City, 2008, pp. 467-502.
 27. _____, "The Civil Market: Medieval Franciscan Ideas to Solve 21st Century Economic Problems," Clemens Lecture Series 2009, Saint John's University, 2009.
 28. _____, "Civil Economy: A New Approach to the Market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CERCA, REVISTA DE PENSAMENT I ANÀLISI, NÚM. 23. 2018. pp. 151-168.
 29. Zamagni, S. and V. Zamagni, *La cooperazione*, 송성호 옮김,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북돋움, 2009.

Happiness and the Social Economy: Focusing on the Argument Structure of Civil Economy

Sang Ho Lee*

Abstract

The Civil Economy provides an answer to Easterlin's paradox by suggesting economics of happiness based on relational goods. It emphasizes the social economic sphere in which relational goods are produced and consumed, but does not deny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Howev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is more likely to crowd out rather than allow the restoration of the social economy sphere. If then, the validity of the civil economy will depend on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social economy. And the same will be true of the logical and realistic validity of the economics of happiness. Ultimately, this issue can be summarized as a question of how to restore and spread the social economy sphere withi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Key Words: economics of happiness, relational goods, civil economy, Easterlin's paradox, social economy

JEL Classification: B2, B3, D6, L3

Received: Jan. 25, 2020. Revised: March 9, 2020. Accepted: March 23, 2020.

* Assistant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Phone: +82-2-2290-1631, e-mail: lsh09191@naver.com